

4

March 2017
No.58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리더칼럼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이봉찬

이슈진단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요 창출 건설 프로젝트의 필요성

연구원소식

차기정부 건설정책 과제 토론회 개최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건설 미래비전 세미나 개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계약 체결
저비용·고효율 리모델링 연구단 과제 계약 체결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동산관리업 진출 방안 연구용역 계약체결
시설물 업종 시장분석 및 특화상품개발 연구용역 계약체결

발간물안내

차기정부의 건설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튼튼한 경영기반 구축”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이봉찬

향기로운 봄이 푸르름을 더해 가듯이 봄의 기운을 듬뿍 받아 여러모두 밝고 환한 봄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딘 나무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처럼 지금껏 어려운 여건 속에도 곳곳이 지역경제에 기여해 오신 전문건설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도회 실적신고 접수결과 우려와는 달리 총 기성실적이 전년대비 12.8% 이상 증가하여 근래 들어 최고의 기성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약 75%(1,912개사 중 1,424개사)에 상당하는 업체들 평균 기성액이 전체 평균(747백만원)의 절반을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 공사에서 지역 업체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현실에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공사, 대규모 공공주택 조성 등 외적인 건설경기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방정부와 시행사의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무관심과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지역 업체 보호·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된 정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정책시행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실에 맞는 입찰제도의 개선으로 중소 지역 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시대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영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협회는 업계가 떠안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정부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업계의 현실이 정부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제시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건설현장이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지금, 새로운 국가리더를 뽑기 위한 선택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은 후 우리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선택함에 있어 한층 신중해집니다. 부디 대한민국 경제 기반인 건설 산업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가 선택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홍성호 연구위원(hsh3824@ricon.re.kr)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이하, 직접구매제도)라 함은 20억 원(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발주 시 발주기관은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자재 품목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직접구매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시설물의 최종 소비자가 입게 될 피해 때문이다.

첫째, 직접구매제도를 통해 구매된 공사용 자재의 하자 책임에 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자재 품목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시공사의 탓인지 중소기업이 납품한 자재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하자책임 소재의 불명확은 하자보수 지연 또는 불이행을 유발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공사용 자재에 대한 제조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시공사보다 짧다. 발주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자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재의 납품 1년 이후 발생한 하자를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아 발주기관이 별도 비용을 들여 시공사 또는 다른 제조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대신하게 하고 있다. 이는 전문 하자보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설물 최종 소비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한정된 자재만으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힘들다. 최근에 와서 소비자는 공공 아파트 등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의 고품질 자

재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발주기관은 조달청에 등재된 소수의 중소기업자재만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자재를 선택하기 곤란하다. 또한 적은 수의 중소기업만이 경쟁하는 구조 하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우수한 품질의 자재 공급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공공 아파트 등에서 소비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재 선택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판로지원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소비자의 피해는 큰 실정이다. 또한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며, 중소기업 보호하고 육성하는 유일한 수단도 아니다. 따라서 직접구매제도의 존재 여부를 비롯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수요 창출 건설 프로젝트의 필요성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사회기반시설(SOC) 집행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약 20% 감소한 18조 원 규모이다. SOC예산은 2015년 24조 8000억 원(추경 포함 26조 1000억 원), 2016년 23조 7000억 원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도 SOC예산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20조 원 밑으로 추락하게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6년의 23조 7000억 원에서 2020년 18조 5000억 원으로 연평균 6%씩 감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장 올해부터 18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준용하는 가이드라인인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보면, SOC분야에서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로 신규소요를 최소화, 계속사업 중 집행부진 및 성과미흡 사업 등은 연차별 적정 투자규모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SOC유지 보수 및 운영비 절감,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의 SOC투자는 소극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둔화를 건설투자 확대가 보전하는 구조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참여를 북돋우는 수요 창출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이 중요하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

해 대규모 공공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는 등 건설투자를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낙후한 고속도로와 공항, 댐 등 사회기반시설에 10년간 1조 달러(약 1131조 원)을 투자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한 대규모 도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주택난을 해결하고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앞으로는 쇠퇴하는 도시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소가 유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건설 프로젝트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는 2013년 6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자주체 중심의 쇠퇴도시 재생계획을 지원함에 따라 2014년 기준으로 13개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 모델을 확립하고, 2016년 신규 도시재생 사업 지원 대상지역을 33곳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지역과 국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구도시의 대규모 수요 창출 건설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차기정부 건설정책 과제 토론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4월 5일 오전 10시30분, 삼정호텔 카라홀에서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월, 우리 연구원은 차기정부 건설정책 과제에 대한 TFT를 구성한 바 있으며, 「차기정부의 건설정책과제」로 3대 핵심가치(“혁신성장”, “공정시장”, “좋은 일자리”)와 “3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아울러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수요창출 프로젝트로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하였다.

동 토론회에서는 우리 연구원의 박선구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차기정부의 건설 분야 핵심가치와 기본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주요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 윤강철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 이종광 산업혁신연구실장이 건설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시스템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 박광배 경제금융연구실장이 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 김태준 책임연구원이 건설업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건설업 청년 유인정책, 청년고용 건설업체 지원정책, 건설역량 중장기 확보 전략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서명교 원장은 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새로이 탄생할 정부의 건설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건설 미래비전 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건설 미래 비전’ 세미나를 건설업계 관계자 등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 준비와 더불어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건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김중로 의원(국민의당)과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이 공동 주관했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동영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우리 연구원의 박선구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뉴노멀 △자본주의 4.0 △소통과 신뢰를 키워드로 최근 건설환경의 변화를 설명했으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 수익중심 경영,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가치창조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전문건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건설 목표를 혁신적, 공정한, 안전한 건설로 설정해야 한다.’며 혁신·공정·안전을 키워드로 한 전문건설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서명교 원장은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세미나는 산업계, 학계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연구원에서도 미래 준비에 앞서서 꾸준히 관련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계약 체결

우리 연구원은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체결하고, 4월 14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동 연구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거세게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될 예정이다.

- 아울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강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홍성호 연구위원은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 노후화 적극 대응을 통한 국민 안전 인식도 제고, 스마트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의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의 해외 노후 SOC 시장 진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저비용·고효율 리모델링 연구단” 과제 계약 체결

지난 3월 31일, 우리 연구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주거환경연구사업 중 하나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의 과제수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 동 연구는 2022년까지 총 7년에 걸쳐 진행되는 다년도 연구단 과제로,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유일한 연구실장)

연구단은 이 연구사업을 통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및 리모델링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의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결과 적용 및 보급은 물론 국내 건설사·리모델링 전문업체·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리모델링 업무의 매뉴얼화 및 주택 공급기관 전 분야에 걸친 기준 확대적용 등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리 연구원에서는 주관기관인 아주대와 함께 리모델링 실증사업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동산관리업 진출 방안” 연구용역 계약체결

지난 4월 4일, 우리 연구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동산관리업 진출 방안”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과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업 진출의 신규사업을 모색하고 그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이다. 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14개 회관 건물 분석을 포함한 현황 파악과 함께 부동산관리업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조합의 부동산관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설립과 그 운영방안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 연구는 박선구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8월까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시설물 업종 시장분석 및 특화상품개발” 연구용역 계약체결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14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시설물업종 시장분석 및 특화상품개발”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연구용역은 국내 건설업이 유지보수로 그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해당 업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며, 국내 건설업 전망, 시설물 유지관리업 실태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시설물 유지관리업에 특화된 보증, 융자, 공제 상품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을 예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박선구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하반기까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정부의 건설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우리 연구원은 지난 1월, 차기정부 건설정책 과제에 대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물인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설업은 그동안의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내수부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와 조우하면서도 내수경기에 큰 버팀목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은 이전과는 다른 도전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미래의 메가 트렌드는 더불어 사는 가치가 강조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과 기술혁신으로 인해 창조적 파괴가 만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을 들 수 있다. 우리 건설업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야 한다.

우리 연구원은 동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성장', '공정시장', '좋은 일자리'의 3대 핵심가치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경제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올바른 건설정책 방향을 위해 정책과 전략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제안한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30개 세부과제)

혁신 성장지원 (12개 과제)	①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②건설시스템 개선 ③건설융합촉진법 제정 ④빅데이터 구축 ⑤기술 R&D 추진 ⑥시설물 장수명화 ⑦재해재난 성능개선 ⑧생활밀착형 SOC사업 ⑨기후변화 대응 ⑩통일건설사업 추진 ⑪맞춤형 해외건설지원 ⑫ 전문건설 경쟁력 강화
공정 시장확립 (11개 과제)	①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②제값받는 공사비 ③적격심사 개선 ④공정거래 확립 ⑤징벌적 손해배상 ⑥하도급 입찰공개 ⑦사전조정제도 도입 ⑧추가공사비 지급 ⑨하차담보책임 개선 ⑩공정입찰제 마련 ⑪공제조합 역할 확대
좋은 일자리창출 (7개 과제)	①청년일자리 확대 ②안전 사각지대 해소 ③취업지원사업 활성화 ④기능인등급제 도입 ⑤사회보험제도 개선 ⑥건설전문가 양성 ⑦무등록업체 시공규제
수요창출 프로젝트	성장의 활력을 견인할 담대한 수요창출 프로젝트 추진 (도시재생산업)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